

Vol. 45

주간

# 농업농촌식품동향

2019. 11. 11.

## ■ 정책동향

-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 발표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선언
- 기획재정부-WB,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
- 2019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 농특위,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제주, 전북, 경북)
- 2019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2개소 공모
-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
- 농식품 수출 확대 총력 지원
- 2020년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공모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주요 동향 등

## ■ 아젠다발굴

- 이슈 브리프 1 | 농업 직불제 관련 민원 분석
- 이슈 브리프 2 |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농식품부)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 2018년 농업법을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 강화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유럽연합 생산자조직의 사업계획과 정책 지원체계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농촌진흥 정책 방향
- 언론 동향 | 유럽연합 PO제도와 국내 조직화 사례 토론회 주요 내용

## ■ 통계·조사

-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 정책동향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 발표**

자료 : 기획재정부(2019.11.6.)

### □ 개요

- [범부처 인구정책 TF\*,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 발표, 2019.11.6.]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
  - ※ 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통하여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4대 핵심 전략\*\*을 마련하였으며, 지난 2019년 9월 18일 첫 번째 전략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
  - ※ ※ ① 생산연령인구 확충, ②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③ 고령인구 증가 대응, ④ 복지지출 증가 관리
- (추진 배경)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
- (주요 내용) △**교육분야**·교육시스템의 효율적 개선과 평생교육체계 구축, △**국방분야**·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 △**지역분야**·지역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및 지자체 간 협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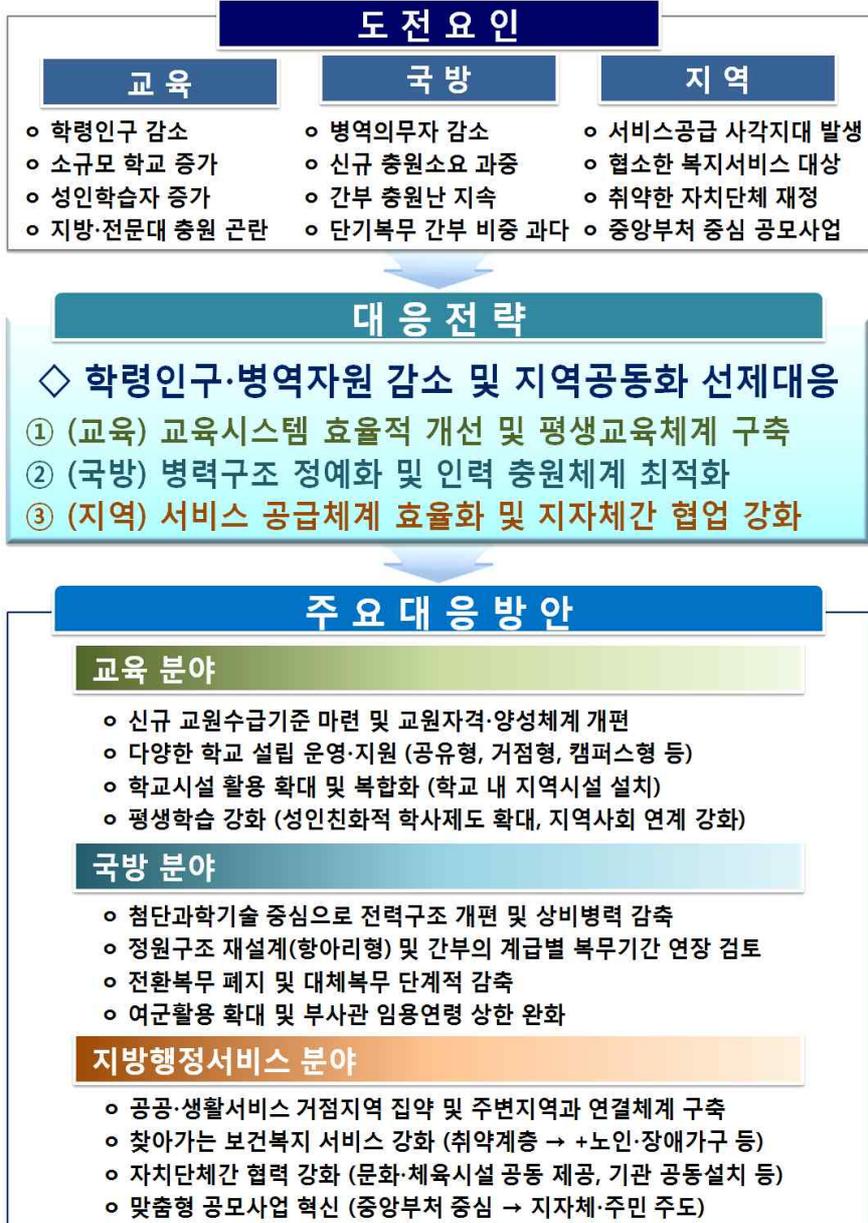
### □ 주요 내용

#### 1. [교육분야 과제] 학령인구 감소 대응

- 학령인구 변화 및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및 **양성 규모 조정**
  - ※ 2020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 개시
  - ※ ※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2018~2021): 2018년 교(원)대,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 등 평가 →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 정원,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에 반영
- 인구감소지역 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
  - ※ 공유형(소규모 학교 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

## ㉔ 정책동향

### ▮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도전요인과 대응전략 ▮



-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 복합화 시범사업(마을공동체 학교건립 9개교, 2020~2022) 및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2019.4/4~)

-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하여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 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

※※ 정해진 기준 내에서 집중강의, 집중이수 등 자유로운 교과 운영 가능

## ㉔ 정책동향

### 2. [국방분야 과제] 병역자원 감소 대응전략

- 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상비병력**을 **감축**(2022년까지 50만 명)
  - ※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활용
-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를 **재설계\***하고,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 검토**
  - ※ 갈수록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는 확대 추진(피라미드 구조 → 항아리 구조)
- **전환복무**(의경, 해경 등)는 **단계적**으로 **폐지**,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현(現) 경제상황 고려 개선\***
  - ※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
- 간부 인력 확충을 위해 **간부 여군 비중**을 **확대**(2019: 6.2% → 2022: 8.8)하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상향 조정**(27세 → 29)
- 국민적 공감대·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 검토**(관련 연구용역 후 검토 추진)

### 3. [지역분야 과제] 지역공동화 대응전략

-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하여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 ※ 거점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 시설을 집약 제공하고,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거점지역-주변지역 간 연결체계를 수립
- 기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위주의 사후적 지원에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대상 확대\***
  - ※ 생애전환기(노인 도래 가구, 출산·양육 가구), 돌봄필요(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위기가구(1인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 가족) 등
-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 공동설치·운영\*\***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

## ㉔ 정책동향

※ (예시) 도서관 공동이용(천안·아산시), 공동형 장사시설 설치(화성·부천·광명) 등

※※ (일본의 공동설치 사례) 의회사무국, 각종 위원회, 보건소 등

-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과 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

※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이고, 유사·중복적인 지역공모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주민 주도·지역 맞춤형으로 전환

- **[향후 계획]** 정부는 금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도 **추후 경제활력 대책회의(2019.11월 중)에 상정·발표**할 예정이며, 확정된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집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

※ ③ 고령인구 증가 대응, ④ 복지지출 증가 관리

※※ (단기과제) 내년까지 조치할 과제

(중기과제) 현(現) 정부 임기 내 조치할 과제

(장기과제) 현(現) 정부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다음 정부에서 조치할 과제

※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범부처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II) 발표 – 절대인구 감소 증격 완화방안-”

([http://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28&menuNo=4010100](http://www.moef.go.kr/nw/nes/nesdta.do?bbsId=MOSFBBS_00000000028&menuNo=40101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㉔ 정책동향

### ◆ 총괄정책 동향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선언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11.5.)

### □ 개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개최, 2019.11.4, 태국 방콕]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정상회의가 2019.11.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주요 내용) △RCEP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였음을 선언, 2020년 최종 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와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가 노력하기로

※ RCEP은 2013.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간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 국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음.

### □ RCEP 협정문 합의 주요 내용

- [1. 최신 무역규범 확립] 한-아세안 FTA에 미포함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 확보
  -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 ⇒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디지털 가치사슬 참여 촉진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발전 가속화가 기대
  - 또한, 지식재산권 챕터를 통해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 규범을 마련하여, 그동안 지식재산권 챕터가 없었던 한-아세안 FTA를 보완 ⇒ RCEP 역내가 한류 중심지임을 고려할 때,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RCEP 지역 내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㉔ 정책동향

- 아울러, 중소기업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고려, **중소기업 챗터**를 도입하고, **정부조달, 경쟁** 등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챗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
- [2. 무역원활화 기반 마련]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 강화 기반 마련**
  - 원산지 기준 관련 그간 RCEP 참여국과 맺은 **7개 FTA\***마다 각각 다른 **원산지기준**을 통일하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활용 편의성**을 제고 ⇒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원산지 제도를 개선하여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 한-싱가폴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호주 / 한-중국 / 한-베트남 / 한-뉴질랜드
  - RCEP 참여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가공**하여도 **재료누적**이 인정되어 **역내 생산 가치사슬 형성** 및 **역내 산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기대
  - 한-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챗터**를 도입하여 **통관 분야 원활화**를 통한 우리 기업들이 **RCEP 활용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3. 서비스 및 투자 규범 개선] 한-아세안 대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 강화** 및 우리 **투자자의 권익 보호 수준 제고**
  - (**서비스**) 기존 아세안 등과의 FTA에 비해 **자유화 요소**를 강화하여, **역내 서비스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기반**을 확보
  - (**투자**) 對RCEP 국가 최근 투자증가 추이를 반영하여, **한-아세안 FTA 이상**의 수준 높은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
- [4. 신남방 핵심국가들과 장기적 파트너십 확보] 역내 경제발전 및 성장을 위해 **협력 촉진기반**을 마련
  - 협력 챗터를 통해 **발전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호혜적 관계** 속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함으로써 아세안 등 **역내국**과 **전략적 협력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

## ㉔ 정책동향

- [향후 계획] 참여국들은 협정문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년 최종 서명기로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RCEP 타결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후생 증진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 RCEP 협정문 타결 계기 산학관 간담회 개최, 2019.11.5.]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2019.11.4.) 계기, RCEP 및 신남방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개최
  - (주요 내용) △제3차 RCEP 정상회의(2019.11.4.) 계기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의 성과 및 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RCEP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2019.10.16. 실질 타결 선언) 주요 결과 및 여타 신남방 FTA 추진 동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

## 기획재정부-WB,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

자료 : 기획재정부(2019.11.7.)

- [기획재정부·세계은행그룹(WB) 공동\*, 제1회 글로벌 혁신성장포럼 개최, 2019.11.7.] 2019.11.7일부터 11.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될 5개 세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 기업인, 관계 부처, 연구기관 종사자 및 ‘혁신’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 등이 참석해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놓고 활발히 논의
  - ※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개최
  - ※※ (세션1) 글로벌 산업혁신 트렌드/ (세션2) 한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과제/ (세션3) 공유플랫폼이 만드는 일상의 변화/ (세션4) 데이터·AI·로봇이 함께할 우리의 미래/ (세션5) 함께 이루는 혁신 - 오픈이노베이션
- (면담) 구윤철 2차관과 세계은행 빅토리아 콰콰(Victoria Kwakwa) WB 부총재는 행사에 앞서 진행된 면담에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혁신성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해 글로벌 혁신성장 포럼을 발전시켜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

## ㉔ 정책동향

- (구윤철 차관 개회사)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으로 ‘DNA(데이터·AI·네트워크) + BIG3(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전략 등을 설명하였으며 특히,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5G기술과 이를 응용한 융복합 제품·서비스 개발 전략 등을 강조하여 소개
- (빅토리아 과학 부총재 환영사) 세계경제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혁기의 한 가운데에 있다고 하면서 「2019년 세계개발보고서」를 인용하며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가져올 새로운 기회와 위협’에 대해 세계가 함께 공조해 가야 한다고 강조, 이를 위해 기술·혁신을 통해 성공적 경제성장을 창출해온 한국과 혁신성장 관련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
- (기조연설) 이정동 서울대학교 교수(“축적의 시간” 저자)와 벤 넬슨 미네르바스쿨 설립자, 데니스홍 UCLA 교수가 각각 기조강연을 진행

### 〈기조연설 주요 내용〉

- ◆ (이정동 서울대 교수) 「한국경제의 도전: 한국만의 혁신에서 세계 속의 혁신으로」라는 題下로 한국경제의 大 전환을 위한 방향과 세계 속의 혁신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
- ◆ (벤 넬슨 미네르바스쿨 설립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기반 능동형 교육 플랫폼’, ‘무(無) 캠퍼스’ 등으로 대표되는 미네르바 스쿨과 같은 혁신적 교육기관이 미래의 교육 트렌드가 될 것임을 밝혀
- ◆ (데니스홍 UCLA 교수) 「로봇의 기계적 지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로봇의 미래상으로 ‘인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로봇’을 제시하며, 로봇기술의 혁신 사례와 미래 철학에 대해 설명

-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동 포럼을 혁신성장 논의의 허브로 발전시켜 글로벌 혁신성장 트렌드를 점검하면서 제시된 혁신과제 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데에 적극 활용할 계획

## 2019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자료 : 고용노동부(2019.11.8.)

- [고용노동부, 2019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신규 인증 2019.11.8.] 올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9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
- (주요 내용) 2018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증가(265개소 → 318)하였으며 이로써 총 2,372개의 사회적기업이 활동, 이들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는 46,665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은 28,263명(60.6%)

## ㉔ 정책동향

### ▣ 주요 인증 사회적기업 ▣

| 구분                                     | 주요 내용  |
|--|--|
| 주식회사 그림플레이<br>(서울 금천구 소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원 프린터로 개인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용 필기 보조 기구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장애인용 필기구 크기는 대중소 밖에 없어 손을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보조 기구 등을 제작·보급</li> </ul> </li> </ul>         |
| 홍성우리마을 의료소비자<br>생활 협동조합<br>(충남 홍성군 소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고령화율이 높고 의료 기반이 부족한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노인 가정이나 마을을 방문해서 건강 문제를 살피고 교육과 문화 모임을 지원</b></li> </ul> </li> </ul>  |
| 유한회사 아르스 뮤직 에듀<br>(세종시 소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취약 계층과 일반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저소득층·장애인·비장애인 청소년이 함께 연주한 공연의 입장료를 기부하는 희망 나눔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등도 운영</li> </ul> </li> </ul> |
| 강서나눔돌봄센터<br>사회적협동조합<br>(서울 강서구 소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돌봄 사업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 8월 현재 223명을 고용(이 가운데 고령자 등 취약 계층 138명)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재가 방문 요양 사업을 진행하는 등 취약 계층에 좋은 일자리를 제공</li> </ul> </li> </ul>          |

## ◆ 농업·농촌 동향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4.)

- [농식품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조 497억 원 지급, 2019.11.4.] 2019년도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019.11.4일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

- (주요 내용) △지급액\*...1조 497억 원, 쌀고정 8,020억 원, 밭농업 1,997억 원, 조건불리지역 480억 원, △지급인원\*\*\*...1,135천 명, △지급면적\*\*\*\*...1,258천 ha, △지급기간...2019.11.4.(월)~11.8.(금)

※ 1인당 평균 지급액 925천 원

※※ 쌀고정 787천 명, 밭농업 593천 명, 조건불리지역 137천 명

※※※ 쌀고정 802천 ha, 밭농업 368천 ha, 조건불리지역 88천 ha

## ㉔ 정책동향

### ▣ 직불금 지급현황

| 구분   | 지급액(억 원) | 지급인원(천 명)       | 지급면적(천 ha) | 1인당 지급액(천 원) |
|------|----------|-----------------|------------|--------------|
| 쌀고정  | 8,020    | 787             | 802        | 1019         |
| 밭농업  | 1,997    | 593             | 368        | 337          |
| 조건불리 | 480      | 137             | 88         | 350          |
| 계    | 10,497   | 1,135<br>(중복제거) | 1,258      | 925          |

※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방비 미포함

- (공익형 직불제 진행 상황)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 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
- (변동직불금) 2018년산·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

### ▣ 지자체별 직불금 지급 계획(2019.10.29. 기준)(단위: 명, 백만 원)

| 시도 | 쌀고정     |         | 밭농업     |         | 조건불리지역  |        | 합계        |           |
|----|---------|---------|---------|---------|---------|--------|-----------|-----------|
|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인원        | 금액        |
| 합계 | 786,682 | 802,005 | 592,529 | 199,715 | 137,040 | 47,974 | 1,134,894 | 1,049,695 |
| 서울 | 161     | 60      | 38      | 5       | -       | -      | 199       | 65        |
| 부산 | 3,331   | 1,400   | 1,100   | 169     | -       | -      | 4,431     | 1,569     |
| 대구 | 5,429   | 1,877   | 3,305   | 528     | 123     | 22     | 8,857     | 2,427     |
| 인천 | 8,891   | 11,503  | 1,341   | 261     | 5,907   | 1,024  | 16,139    | 12,788    |
| 광주 | 7,442   | 3,682   | 3,642   | 893     | -       | -      | 11,084    | 4,575     |
| 대전 | 2,407   | 801     | 2,204   | 373     | -       | -      | 4,611     | 1,174     |
| 울산 | 6,915   | 3,010   | 3,813   | 842     | 39      | 19     | 10,767    | 3,871     |
| 세종 | 5,497   | 3,378   | 3,566   | 731     | -       | -      | 9,063     | 4,109     |
| 경기 | 77,929  | 67,280  | 49,526  | 11,711  | 797     | 256    | 128,252   | 79,247    |
| 강원 | 33,100  | 34,276  | 36,513  | 11,227  | 19,827  | 10,069 | 89,440    | 55,572    |
| 충북 | 54,603  | 42,421  | 49,146  | 14,622  | 7,343   | 2,706  | 111,092   | 59,749    |
| 충남 | 122,793 | 142,577 | 83,154  | 20,259  | 3,349   | 706    | 209,296   | 163,542   |
| 전북 | 93,489  | 131,541 | 68,781  | 30,341  | 5,942   | 1,684  | 168,212   | 163,566   |
| 전남 | 131,303 | 166,380 | 108,610 | 49,991  | 30,408  | 8,063  | 270,321   | 224,434   |
| 경북 | 145,866 | 114,820 | 119,011 | 36,034  | 24,216  | 9,464  | 289,093   | 160,318   |
| 경남 | 112,706 | 76,991  | 60,536  | 15,913  | 19,319  | 3,991  | 192,561   | 96,895    |
| 제주 | 8       | 8       | 14,545  | 5,817   | 20,254  | 9,969  | 34,807    | 15,794    |

※ 국비 기준(조건불리직불 지방비 미포함)

※ 합계의 인원은 중복제거 값임.

※ 누락자 추가 지급 등 지급실적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㉔ 정책동향

| 〈쌀고정·발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개요〉   |  |
|---|--|
| <p>◆ <b>쌀고정직불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농지: 1998~2000년 동안 논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재배)에 이용된 농지</li> <li>-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li> <li>- 지원단가: 평균 100만 원/ha(진흥지역 1,076,416원/ha, 진흥지역 밖 807,312원/ha)</li> </ul> <p>※ 벼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쌀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 설정 이후 2020년 지급 예정</p>  |  |
| <p>◆ <b>발농업직불제(밭고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농지: 2012~2014년 동안 발농업(벼, 미나리, 왕골, 연근 제외)에 이용된 농지</li> <li>-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등</li> <li>- 지원단가: 평균 55만 원/ha(진흥지역 702,938원/ha, 진흥지역 밖 527,204원/ha)</li> </ul>   |  |
| <p>◆ <b>발농업직불제(논이모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농지: 쌀직불금 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신규 조성된 논</li> <li>-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 등</li> <li>- 지원단가: 50만 원/ha</li> </ul>  |  |
| <p>◆ <b>조건불리지역직불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농지: 2003~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로 관리된 초지</li> <li>-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를 실제 경작·관리하는 농업인 등</li> </ul> <p>※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및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읍·면지역의 모든 법정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단가: 농지 65만 원/ha, 초지 40만 원/ha</li> </ul> |  |

## 농특위,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제주, 전북, 경북)

자료 :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2019.10.30./11.1./11.4.)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농특위),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 개최(제주·전북·경북), 2019.10.30., 11.1., 11.5.]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을 개최(제주, 전북, 경북)하여 **도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농업정책을 모색**
- (**개최 목적**) 농특위와 전국 9개 도(道)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2019 전국 순회 타운홀미팅’은 **농어업·농어촌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소통**을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농정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초를 마련

## ㉔ 정책동향

◆ (박진도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을 통해 “농어업·농어촌의 문제는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이고, 농어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며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 한다” 고 강조

- (제주) 2019.10.3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제주 퍼시픽호텔 펄홀에서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 제주’ 를 개최하여 제주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농정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휴경보상금을 지급하고 수평적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등 가장 진일보한 혁신농정에 매진하고 있다” 며 “오늘 행사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제주만의 특성에 맞는 농업정책을 직접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통해 제주도의 농정이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혀

- (전북) 2019.11.1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전북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농정방향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송하진 전북도지사)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농민 공익수당 등 선도적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화·발전 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혀

- (경북) 2019.11.4일 오후 2시부터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우리나라와 경북지역 농어업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를 위한 농정방향의 혁신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

◆ (윤종진 경북 행정부지사) “WTO 개도국 지위 특혜 철폐, 기후변화,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위해 경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 고 밝혀

- (기대 효과) 전국 순회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분권에 기초한 자율과 창의 농정의 실현 방안 전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일정) 앞으로 2019.11.13일 경기, 11.15일 충남, 11.20일 전남, 11.28일 강원, 11.29일 충북 등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별로 100명 규모의 원탁토론회와 타운홀 미팅을 이어갈 예정

## 2019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5.)

- [농식품부, 2019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 2019.11.6.] 2019.11.6일 “정책의 생각을 바꾸다, 국민의 생활이 바뀌다” 라는 주제로 「2019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를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개선 사례를 농업인·국민이 직접 선정하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공론의 장으로 운영
  - ※ 콘서트: 내부 발표행사에서 벗어나 수요자와 함께 평가하고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
- (주요 내용) 5대 농식품 혁신정책 및 5대 적극행정 사례 발표, 국민 평가

| 〈분야별 발표 사례〉   |
|---|
| <p>◆ <b>혁신정책 5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소외지역 농촌 주민을 위한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확산</li> <li>- 자동비행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 현장조사로 농업보조금 누수방지</li> <li>- 수요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출물류비지원시스템 개편</li> <li>-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로컬푸드 확산</li> <li>- 공유를 통한 외식창업인큐베이팅 청년키움식당</li> </ul> <p>◆ <b>적극행정 5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 과일간식 친환경 용기 전환</li> <li>- 과잉생산 양파 수출지원으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li> <li>- 친환경인증 단체심사 방법개선으로 선량한 농가피해방지</li> <li>- 대학·연구소에 잠자고 있는 식품특허, 기술이전을 통해 깨어나다</li> <li>-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부동산가치 인정으로 농업인 재산권 강화</li> </ul> |

## 한·중·일 미래농업 심포지엄 개최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6.)

- [농식품부, 한·중·일 미래농업 심포지엄\* 개최, 2019.11.8.] 2019.11.8일 “한·중·일 농업혁신 시스템 현황과 농업의 미래” 라는 주제로 국가 간 경계를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농업 연구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
  - ※ (주최) 농식품부, (주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주요 내용) 아시아 3개국 농업분야 국가과학기술 혁신시스템 현황 및 민간 참여 사례를 공유하고,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상을 제시

##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2개소 공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4.)

-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2개소\*\* 공모, 2019.11.4.]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들에게 **적정 임대료로 초기자본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2개소를 공모(2019.11.4.~11.29)
  - ※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 스마트팜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창업 초기자본과 영농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경북 상주,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에도 임대형스마트팜이 4개소 조성(~2021)될 계획에 있으나, 임대형스마트팜에 대한 청년의 수요가 많아 혁신밸리 외 지역에도 2개소 추가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
  - ※ ※ (조성 규모) 개소당 5ha, (예산) 개소당 총사업비 150억 원
  - (주요 내용) △**기반·온실조성**…청년에게 농지·시설임대가 가능한 부지의 기반조성, **온실 및 에너지지원시설 조성**(개소당 약 5ha), △**운영·관리**…시·도 단위에서 임대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한 뒤, **2년간(2020-2021년) 시설조성 후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운영**
  - (기대 효과)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이 **청년들이 농업·농촌으로 찾아오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초기 자본과 영농경험이 없고 여가 등을 같이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임대형스마트팜이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

## 국산 통밀 학교급식 확대 시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4.)

- [농식품부, 국산 통밀 학교급식 확대 시행, 2019.11.4.] 학생 건강 차원에서 **잡곡 섭취 비율을 높이고**, 잡곡으로서 **통밀의 우수성을 알려 국산밀의 소비기반을 확대**하고자, **2018년에 서울·경기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던 ‘국산 통밀 학교급식’을 11개 시·도\*\*로 확대 시행**
  - ※ 통밀: 통밀의 겉껍질 일부를 벗겨내어 잡곡밥 형태로 섭취하는 것으로, 식이섬유·폴리페놀·비타민·무기질 등이 풍부
  - ※ ※ 충북, 전남, 전북, 대구, 경남, 경북, 강원, 제주, 부산, 세종, 울산
  - ※ ※ (2018) 서울·경기 초·중·고 104개교, 1,550kg → (2019) 전국 11개 시·도, 초·중·고 126개교, 3,502kg 내외

##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4.)

-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출산급여 지급, 2019.11.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고용노동부) 시행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혜택
  - ※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출산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주요 목적) 여성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대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 (주요 내용) △지원대상\*...소득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지원수준...월 50만 원씩 3개월의 출산 급여 지급, △신청방법...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
  - ※ 농업인의 경우 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②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여성농업인
- (기대 효과) 연간 1,500명의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경영주 등록이 활성화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

## 농식품 수출 확대 총력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8.)

-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 개최, 2019.11.7.] 2019.11.7일 「농식품 수출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농식품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선 농산물 성수기인 연말·연초 해외시장 개척 총력 지원을 추진
- (주요 내용) △연말까지 농식품 수출 붐업을 위한 마케팅 총력 지원\*, △주력 시장 외에 신규 시장으로의 다변화도 적극 지원\*\*, △경쟁력 제고: 수출 통합조직 신규 결성 지원과 현장 애로 지원
  - ※ 식품 해외 판촉 147회, 온라인 최대 수요 시기(광군제, 11월) 집중 판촉 등 연말·연초 현지 마케팅 집중 지원
  - ※※ 신남방 등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유망품목 마케팅 및 수입상 알선 등 시장 다변화 집중 추진

㉔ 정책동향

◆ 축산 동향

2020년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공모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5.)

○ [농식품부, 2020년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조성 계획 공모, 2019.11.5.] 축산 악취·질병 문제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을 대상으로 2019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지역을 3개소(강릉, 당진, 울진) 선정한 데 이어, 2020년 5개소를 신규로 공모

- (주요 내용) △공모기간...2019.10.31.~2020.1.31., △공모절차...공모(2019.10.31.) → 사업계획 평가(2020.2월 초) → 선정(2020.2월 중), △대상축종...한우, 돼지, 젓소, 가금류, △지원내용...기반 조성비(부지 평탄화, 도로, 전기 등) 및 관제·교육시설비\*와 축사·분뇨처리·방역시설 사업비\*\*(기존사업) 지원

※ 기반 조성비 52.5억 원 및 관제·교육시설 10억 원

※※ 축사·분뇨·방역시설은 기존 정책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

┃ 스마트 축산단지의 분뇨질병생산관리 체계 ┃

| 구분      | 관리체계  |   |
|---------|---|---|
| 가축분뇨 관리 | • 가축분뇨를 축사에서 퇴·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시스템에서 악취 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              |   |
|         | 악취관리  | 밀폐 축사구조 → 축사내 공기 정화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완숙퇴비제조 → 농가 환원        |
|         | 수질관리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뇨분리 → 액비저장조 발효 → 발효 완료 → 완숙액비 제조 → 농가 환원    |
| 방역 시스템  | • 축산단지 독립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제한, 사람 및 동물로 인한 질병전파 매개체 유입차단      |   |
|         | 차단방역  | 가축·사료·약품·퇴액비·축산물(원유·계란) 독립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 제한 |
|         | 소독시스템   | 진입 도로 차량 소독시설, 대인·축사 내·외부 소독시설                            |
|         | 폐사축   | 가금·돼지 폐사축은 별도 사체처리기로 내부에서 처리                              |
| 생산성 향상  | • 환경·사양·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제어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하여 축산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 |   |
|         | 환경관리  | 축사 내부 온습도, 정전 등 내부 환경을 제어                                 |
|         | 사양관리  | 개체별 자동급이기, 출하선별기 등을 통한 생산비 감축                             |
|         | 경영관리  | 생산·경영·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

##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2019.11.7.)

- [농식품부 · 환경부,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지원, 2019.11.7.] 축산 약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3.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대비하여, 농가의 퇴비부숙도 준수와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애로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검사와 컨설팅 실시
  - (주요 내용) 시군에서 2019.11.15일까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2019.11월 하순부터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을 추진
  - (향후 계획) 이번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농가별로 퇴비 부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퇴비관리 교육 강화, 공동퇴비사 설치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

※ (예시) 퇴비사 및 장비 부족, 퇴비 부숙 관리요령 부족 등

| 〈가축분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2020.3.25.)〉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가 농경지 등에 가축분 퇴비 살포시 부숙도 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면적 1,500㎡ 이상: 부숙후기 · 완료</li> <li>- 축사면적 1,500㎡ 미만: 부숙중기</li> </ul> </li> <li>◆ 농가는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년 1~2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규모 배출시설: 6개월에 1회 검사</li> <li>- 신고규모 배출시설: 1년에 1회 검사</li> </ul> </li> </ul> |

##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7.)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2019.11.7.)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 2019.11.7.] 2019.10.9일 이후 사육돼지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없었으며, 야생멧돼지에서는 2019.11.7일 철원 및 파주시 민통선 내에서 2건이 추가 발생\*
  - ※ 사육돼지 발생현황(14건): 파주 5건, 연천 2건, 김포 2건, 강화 5건
  - ※ 야생멧돼지 검출현황(22건): 파주 6건, 연천 8건, 철원 8건

## ㉔ 정책동향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현황(2019.11.8.): 총 14건〉                   |  |
|--|--|
| 1) 경기도 파주시 연다산동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16일 → (확진) 2019.9.17일 |  |
| 2)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17일 → (확진) 2019.9.18일  |  |
| 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3일 → (확진) 2019.9.23일  |  |
| 4)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3일 → (확진) 2019.9.24일  |  |
| 5)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소재 돼지농장: (예찰) 2019.9.23일 → (확진) 2019.9.24일  |  |
| 6)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5일 → (확진) 2019.9.25일  |  |
| 7) 인천시 강화군 산삼면 소재 돼지농장: (예찰) 2019.9.25일 → (확진) 2019.9.26일  |  |
| 8)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6일 → (확진) 2019.9.26일  |  |
| 9)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9.26일 → (확진) 2019.9.27일  |  |
| 10)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1일 → (확진) 2019.10.2일 |  |
| 1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1일 → (확진) 2019.10.2일 |  |
| 12)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2일 → (확진) 2019.10.3일 |  |
| 13)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2일 → (확진) 2019.10.3일 |  |
| 14)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 (신고) 2019.10.9일 → (확진) 2019.10.9일 |  |

###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현황 현황(2019.11.8.) ■

| 구분 | 신고          | 확진          | 시도 | 시군구 | 주소            | 결과 | 비고             |
|----|-------------|-------------|----|-----|---------------|----|----------------|
| 1  | 2019.10.02. | 2019.10.03. | 경기 | 연천  | 신서면 도밀리 944   | 양성 | DMZ 내          |
| 2  | 2019.10.11. | 2019.10.12. | 경기 | 연천  | 왕징면 강서리 986   | 양성 | 민통선 내          |
| 3  | 2019.10.11. | 2019.10.12. | 강원 | 철원  | 원남면 진현리 115   | 양성 | 민통선 내          |
| 4  | 2019.10.12. | 2019.10.12. | 강원 | 철원  | 원남면 진현리 25    | 양성 | 민통선 내          |
| 5  | 2019.10.12. | 2019.10.12. | 강원 | 철원  | 원남면 진현리 21    | 양성 | 민통선 내          |
| 6  | 2019.10.14. | 2019.10.15. | 경기 | 연천  | 장남면 판부리 150-2 | 양성 | 민통선 부근(약 900m) |
| 7  | 2019.10.15. | 2019.10.16. | 강원 | 철원  | 원남면 죽대리 산157  | 양성 | 민통선 내          |
| 8  | 2019.10.16. | 2019.10.17. | 경기 | 연천  | 왕징면 강서리 1106  | 양성 | 민통선 내          |
| 9  | 2019.10.16. | 2019.10.17. | 경기 | 파주  | 장단면 거곡리 1066  | 양성 | 민통선 내          |
| 10 | 2019.10.19. | 2019.10.20. | 경기 | 연천  | 연천읍 와초리 615   | 양성 | 민통선 외(약 3Km)   |
| 11 | 2019.10.20. | 2019.10.21. | 경기 | 연천  | 장남면 반정리 652-1 | 양성 | 민통선 내          |
| 12 | 2019.10.19. | 2019.10.21. | 강원 | 철원  | 원남면 죽대리 164   | 양성 | 민통선 내          |
| 13 | 2019.10.23. | 2019.10.23. | 경기 | 파주  | 장단면 석곶리 303   | 양성 | 민통선 내          |
| 14 | 2019.10.23. | 2019.10.23. | 경기 | 파주  | 장단면 석곶리 303   | 양성 | 민통선 내          |
| 15 | 2019.10.24. | 2019.10.25. | 강원 | 철원  | 원남면 죽대리 167   | 양성 | 민통선 내          |
| 16 | 2019.10.27. | 2019.10.28. | 경기 | 연천  | 연천읍 와초리 361   | 양성 | 민통선 외(약 3.5km) |
| 17 | 2019.10.29. | 2019.10.30. | 경기 | 파주  | 군내면 백연리 398   | 양성 | 민통선 내          |
| 18 | 2019.10.29. | 2019.10.30. | 경기 | 파주  | 군내면 정자리 46    | 양성 | 민통선 내          |
| 19 | 2019.10.31. | 2019.11.01. | 경기 | 연천  | 신서면 답곡리 849   | 양성 | 민통선 외(약 1.4km) |
| 20 | 2019.11.01. | 2019.11.02. | 강원 | 철원  | 원남면 진현리 39    | 양성 | 민통선 내          |
| 21 | 2019.11.06. | 2019.11.07. | 강원 | 철원  | 원남면 죽대리 167   | 양성 | 민통선 내          |
| 22 | 2019.11.06. | 2019.11.07. | 경기 | 파주  | 진동면 하포리 240   | 양성 | 민통선 내          |

## ㉔ 정책동향

-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2019.11.7.]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 원\***을 지원
  - ※ 지원조건: 연리 1.8%(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
- (주요 내용) △**지원대상\***…ASF 방역조치로 돼지 살처분수매참여 농가, △**지원 내용**…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노동비 등 축산 경영 자금, △**신청방법**…희망농가는 2019.11.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
  - ※ 인천·경기·강원에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 농가, 다만, ASF 발생 농가, 축산업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조류인플루엔자(AI) · 구제역 주요 동향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9.11.4./11.7.)

- [농식품부, 경기 아산시(봉강천) 야생조류 분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최종 확인, 2019.11.4.] 충청남도 아산시(봉강천)에서 2019.10.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 결과, 2019.11.4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어 해당지역에 대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 유지
- [농식품부, 전국 가금농가 현장점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2019.11.7.]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전국 가금농가\***(4,159호, 전업농) 전체에 대한 **전산 방역관리 카드**를 만들어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
  - ※ 닭 3,000수 이상 3,413호, 오리 2,000수 이상 614호, 메추리·거위 등 기타 가금축종 2,000수 이상 132호
- (주요 내용) △**농가별 방역 취약요인\***, 현장점검 사진과 결과 기록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방역 미흡농가는 1개월 내 재점검**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농가 단위 방역관리 강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개선 작업을 통해 앞으로도 점검결과 분석 등 **체계적인 방역대책 추진**
  - ※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여부, 밀집단지·임대농가 여부, 주변 철새도래지 등
  - ※※ KAHIS: Korean Animal Health Integrated System

## ㉔ 정책동향

- [농식품부, 겨울철 대비 전국 젖소농장 구제역백신 항체검사 강화, 2019.11.5.]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2019.11월부터 2020.1월 상순까지 전국 젖소농장 (5,533여 호)에 대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백신접종이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라 1회 500만 원, 2회 750, 3회 1,000

##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방제조치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인천광역시(2019.11.7.)

- [농식품부 · 환경부 · 인천시, 긴다리비틀개미 발견 방제조치, 2019.11.7.] 2019.11.5일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하여 국립 생태원에서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하여 방제 조치
  - ※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 (2019년 10월 31일)
  - ※※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
  - ※※ 해당 개체는 2019년 11월 2일에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
- (주요 내용) 생태원의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 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되었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

## ㉔ 아젠다 발굴

# 아젠다발굴 농업 직불제 관련 민원 분석 등

## 이슈 브리프 1 농업 직불제 관련 민원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농업 직불제」 관련 민원 분석” (2019.11.5.) 보고서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개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4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의 분석결과를 발표
  -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 농업직불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부터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
- (분석 결과)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53.7%**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신청 도입 등 신청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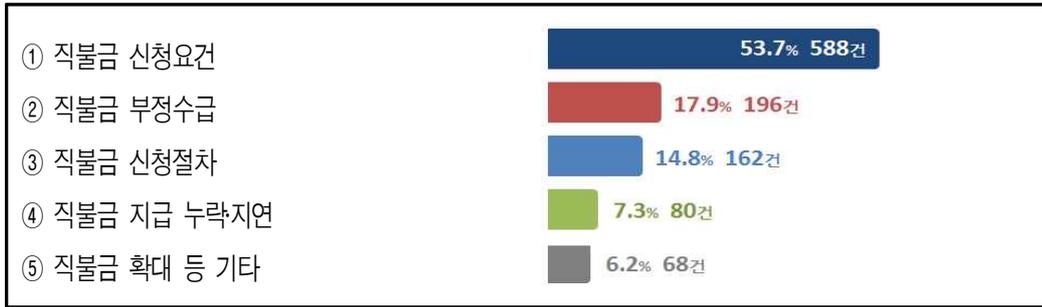
### <민원 내용>

- [민원 추이]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의 월평균 발생량은 26건, 연도별로는 2017년에, 시기별로는 직불금 신청을 시작하는 매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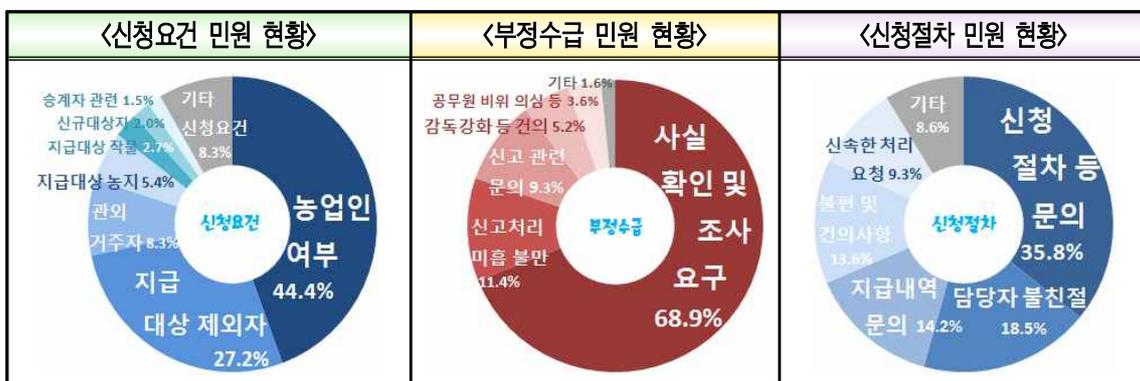


- [민원 유형] ‘직불금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절반을 넘는 **53.7%**(588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17.9%**(196건), ‘직불금 신청 절차’ 관련 민원이 **14.8%**(162건) 등으로 많아

## ㉔ **아젠다 발굴**



- **[신청 요건 민원 현황]** 직불금 신청요건 중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44.4%** (261건)로 **가장 많아**
  - 다음으로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범위와 관련된 민원이 27.2%(160건),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이 8.3%(49건),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관련 문의가 5.4%(32건), 지급대상 작물에 포함 여부 문의가 2.7%(16건) 순
- **[부정수급 민원 현황]** 특정 **논밭** 등에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조사** 요구가 **67.9%**(133건)로 **가장 많아**
  - 다음으로 신고 후 미흡한 처리에 대한 불만이 11.2%(22건), 신고 관련 제도 문의가 9.2%(18건), 직불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요청이 6.6%(13건), 담당공무원 또는 마을이장 등의 비위 의심이 3.6%(7건) 순
- **[신청절차 민원 현황]** 직불금 신청에 **필요한 정보** 문의가 **35.8%**(58건)로 **가장 많아**
  - 이어서 담당공무원 등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이의가 18.5%(30건), 과거 지급내역에 대한 문의가 14.2%(23건), 신청절차 중에 겪는 각종 불편 및 건의사항이 13.6%(22건) 순



## ㉔ **아젠다 발굴**

### <시사점>

- **[직불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에서 직불금 신청 및 내역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검토\*, △농촌 고령화로 전자민원 이용률 저조 문제는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자녀 등의 도움으로 보완 가능\*\*

※ 고령층 농업인의 장거리 거동 곤란이나 잦은 행정관청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 등 농촌사회 불편 해소에 기여

※※ ‘농업 직불금’ 민원에서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신청한 비중이 전체의 10.2%(112건)를 차지

◆ (민원사례) 직불금 신청은 매년 별다른 변동사항 없이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번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직불금 신청 시 마을이장 확인 절차 개선]** 직불금 신청하기 위해 농업인이 직접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마을 이장 확인서 등을 신청 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경\*

※ 신청서 접수 이후 현지조사 기간 중에 행정관청에서 직접 조사하거나 마을이장으로부터 일괄 확인하는 방법 등 검토 ⇒ 마을이장과 면담시간 예약 곤란, 귀농인 증가 등 여건 변화로 마을이장 및 거주자로부터 서명 수령이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작용

◆ (민원사례) 경작사실확인서에 이장의 서명을 받으려니 무엇이라도 대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을 느낌

◆ (민원사례) 농번기에 바쁜 이장을 몇 번씩 약속하고 만나기 힘들니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 시에 재배 작물을 확인하는 방법 건의

- **[신규농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급요건 완화]** △귀농인 등 신규농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해부터 바로 직불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여 귀농·귀촌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등록 연도에 지급이 곤란하면 다음 해에 지급 요건 충족을 전제로 전년도 직불금의 소급 지원을 검토

※ 쌀 직불금 신규대상자는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동안 경작면적이 1천㎡ 이상, 수확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 등 추가 요건 필요

◆ (민원사례) 농업인 A는 350평 받은 경작하여 4년째 쌀 직불금을 수령해 오다 올해에 받은 150평으로 줄이고 논 1,700평을 신규로 매입해서 쌀농사를 지었음. 그런데 쌀 직불금은 300평 미만인 사유로, 쌀 직불금은 1년 차에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올해에는 직불금 신청이 불가

## ㉔ **아젠다 발굴**

- **[직불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투명성 제고]** △부정수급 신고에 필요 정보를 누구나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내역 공개범위 확대** 및 **공개방식 변경\***, △부정수급 신고 처리기한 지정, 단계별 진행상황 통보 등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신고 활성화 대책**에 **상응하는 신고처리 사후관리 강화\*\***, △부정수급 고위험 사업에 농업 직불금 사업을 포함해서 **집중관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증액** 등 **처벌 강화\*\*\***

※ 신청자명 또는 농지 주소를 입력 및 그 결과만 검색할 수 있는 방식에서 읍·면·동 전체 농지의 지급 내역을 일괄 열람으로 개선, 현재 농식품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등록신청자 정보 등 열람 가능

※※ 직불금 부정수급 유형 중 미흡한 처리에 대한 불만 민원이 11.2%(22건)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면 직불금을 부정수급 하는 것이 잘못된 관행 정도로 인식할 우려, 농업소득보전법은 직불금 부정수급 시 제재부가금이 부정수금액의 2배로 최대 5배인 보조금법보다 제재 강도가 약함.

◆ **(민원사례)** 작년 말부터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청문을 시작한다면서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올해 초에는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함.

- **[실효성 있는 사전 안내 및 상담 서비스 강화]** △신청기간 경과 등으로 직불금 지급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전체 농업인에게 **SMS 발송** 등 **개별 안내 필요\***, △직불금 관련 각종 문의에 대해 **고령층 농업인**을 **배려한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 서비스 제공\*\*\***

※ 현재는 신청기간을 인터넷 공고, 마을별 포스터 현수막 게시,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고 전년도 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신청서를 사전 배부 중

※※ 신청요건, 절차 등 업무 내용이 복잡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신규 담당자 업무 숙지 확인 철저

◆ **(민원사례)** 치매 진단도 받는 등 고령의 노인으로 신청 기간에 착오가 있어서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함.

◆ **(민원사례)** 팔순의 농업인이 다리가 불편함에도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겨우 동사무소에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집으로 돌려보냄.

◆ **(민원사례)** 어머니 부탁으로 향후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 농지원부에 땅 지번을 등록하고 싶어 면사무소에 방문했더니, 담당자는 무슨 말이라며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오라는 등 언성을 높이고 불친절하게 응대

## ㉔ **아젠다 발굴**

### 이슈 브리프 2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농식품부)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2019.11.1.)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짧은 시간 내에 주요 현안 및 재정 사업을 검토할 수 있도록 구성된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을 **발간**하였으며, 농식품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 2020년도 예산안 주요 현안 분석 ▣

| 구분  | 주요 내용  |
|---|--|
| □ 주요 현안 분석  |  |
| 1.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사업에 대한 검토  | <b>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시행 중인 농업직불 사업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사업</li> <li>- 2020년 예산안: 1조 605억 원</li> </ul>   |
|   | <b>분석 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업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법률에 대한 심의경과를 반영하여 예산안 심사 필요</li> <li>• 공익형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이 소득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필요</li> <li>• 기존 농업직불 사업이 쌀의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동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제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li> <li>• 공익형직불제는 공익적 기능의 확대를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성'의 구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li> </ul> |
| 2.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관련 사업의 개선과제  | <b>2-1.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관련 사업의 개선과제</b>  |
|   | <b>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시설, 전기, 도로 등을 지원하는 기반 조성 사업</li> <li>- 2020년 예산안: 89억 2,500만 원</li> </ul>  |
|   | <b>분석 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기 선정된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상지에 대한 기반 시설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li> </ul>   |
|   | <b>2-2.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과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b>   |
| <b>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들이 스마트팜 분야에 창농할 수 있도록 실습용 온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li> <li>- 2020년 예산안: 173억 8,800만 원</li> </ul>  |  |
| <b>분석 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순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 2년차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li> <li>•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의 내역 사업인 보육운영비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의 완공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 농업인의 선발 및 교육 일정 조정 필요</li> </ul> |  |

## ㉔ **아젠다 발굴**

| 구분                                       | 주요 내용   |  |
|--|---|--|
|  | 현황  | 2-3.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은 실증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
|  |   | 분석 의견  |
| 3. 친환경농축업 관련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황  | 3-1.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사업 - 2020년 예산안: 90억 6,000만 원</li> </ul>  |
|  | 분석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에서 기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li> <li>- 지자체의 예산확보 일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필요</li> <li>- 동 사업은 2020년에만 시행되는 사업인 반면, 시스템 구축 예산 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적절성에 대해 검토 필요</li> </ul> |
|  |   | 3-2.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
|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의 내역사업인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li> <li>- 2020년 예산안: 11억 1,000만 원</li> </ul>   |
| 분석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의 대상 농가가 108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 축산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li> </ul> |  |
| □ 개별 사업 분석                               |   |  |
| 1.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은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li> <li>- 2020년 계획안: 5,600억 원</li> </ul>   |
|  | 분석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사업실적이 저조하므로 이행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지침을 개선하는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의 필요</li> <li>- 매입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의 작업효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필요</li> </ul>                                |
| 2.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추진체계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 관련 박람회 등을 통합·연계하여 종합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li> <li>- 2020년 예산안: 32억 5,000만 원</li> </ul>  |

## ㉔ **아젠다 발굴**

| 구분  |       | 주요 내용  |
|---|-------|--|
| 재검토 필요  | 분석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사업의 예산안은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어 있으나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할 적절성을 검토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li> <li>•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전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li> </ul>                       |
| 3.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정합성 검토 필요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스마트팜 표준의 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사업</li> <li>- 2020년 예산안: 45억 원</li> </ul>  |
|   | 분석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연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사업 계획은 보조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li> <li>•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표준화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li> </ul>             |
|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환수 실적 저조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의 2020년 R&amp;D 예산안은 27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10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350억 200만 원의 예산안이 편성</li> </ul>   |
|   | 분석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사업비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제고 필요</li> <li>- 2018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R&amp;D과제에 대한 사업비 환수조치 결과 환수처분액 12억 2,320만 원 중 미환수액은 8억 70만 원에 이룸.</li> </ul>          |
| 5. 농지범용화시범사업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정합성 저조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범용화시범사업은 비축농지를 포함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용수 및 배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사업</li> <li>- 2020년 계획안: 2억 원</li> </ul>  |
|   | 분석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농지를 포함하여 50ha의 농지에 용·배수 시설을 구축할 계획인 반면, 농지범용화시범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li> </ul>  |
| 6.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2019년 신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사업 추진 필요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악취,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 사회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축산시설을 이전하여 규모화 된 스마트 축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li> <li>- 2020년 계획안: 225억 원</li> </ul> |
|   | 분석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201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 시행된 사업물량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신중한 사업 확대 필요</li> </ul>   |
| 7. 축산물허용물질 목록제도지원 사업은 전문성 제고 필요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가실태조사 사업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잔류성 시험 분석 사업으로 구성</li> <li>- 2020년 예산안: 17억 9,700만 원</li> </ul>                            |
|   | 분석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역사업인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li> </ul>  |
| 8.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은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은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사업</li> <li>- 2020년 예산안: 5억 2,500만 원</li> </ul>   |

## ㉔ 아젠다 발굴

| 구분  |      | 주요 내용   |
|---|------|---|
|   | 분석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의 가능성과 생산량 감소, 지역 주민의 반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li> <li>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li> </ul>   |
| 9.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바이오가스 비용과 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계 필요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내역사업인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은 기 설치된 공동자원화 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화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li> <li>2020년도 계획안: 70억 원</li> <li>또 다른 내역 사업인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li> <li>2020년도 계획안: 161억 원</li> </ul>                     |
|   | 분석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은 바이오가스의 생산성에 대한 추계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지원비율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li> <li>에너지화 사업은 주변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li> </ul>  |
| 10.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내용 조정은 사업내용 조정 필요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노지에 영농을 하는 농업인을 집단화 및 단지화 하기 위한 사업</li> <li>2020년 예산안: 35억 원</li> </ul>   |
|   | 분석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스마트원예단지조성 사업과 사업시행 주체, 재정 지원방법, 사업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사업내용 조정 필요</li> </ul>   |
| 11. 구제역백신제조 시설 신축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은 국내에 구제역 제조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li> <li>2020년 예산안: 235억 5,000만 원</li> </ul>   |
|   | 분석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의 순연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 잔여 사업비를 전액 편성하였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li> </ul>   |
| 12.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 및 농촌현안해결리빙랩 프로젝트 예산안 편성지침 준수 검토 필요 | 현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amp;D) 사업은 분야별 및 전공별 특수대학원의 설립 등 전문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사업</li> <li>2020년 예산안: 131억 4,800만 원</li> <li>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은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농촌의 현안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사업</li> <li>2020년 예산안: 20억 원</li> </ul> |
|   | 분석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및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은 예산안 편성지침 준수 필요</li> </ul>  |

## ㉔ **아젠다 발굴**

###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2018년 농업법을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 강화

※ 미국 Farmdoc daily의 “Weekly Farm Economics: The Agricultural Risk coverage - County Level(ARC-CO) Option in the 2018 Farm Bill” (2019.9.17.)과 “Weekly Farm Economics: The Price Loss Coverage(PLC) Option in the 2018 Farm Bill” (2019.9.24.)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2018년 농업법을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 강화

- 개정된 **2018년 농업법(Farm Bill)**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장치**를 더욱 **강화**함.
  - 농가는 **가격손실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 PLC)**와 **농업수입보상제도(Agricultural Risk Coverage)** 중 **선택\***하여 **소득 및 경영안정망**을 구축함.
    - ※ 2019/20년 보상제도 선택은 2020년 3월 15일까지임.
  - 2014년 농업법에서는 농가가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선택한 제도를 통해서만 보상을 받았지만 2018년 농업법에서는 **매년 제도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 **[가격손실보상제도]** 주요 품목의 **시장가격**이 **실효기준가격(effective reference price)**보다 **낮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임.
  - **2018년 농업법**에 제시된 **실효기준가격**은 2014년 농업법에 제시된 실효기준가격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개정됨.
  - (**기준가격 책정**) 실효기준가격은 **법정기준가격(statutory referece price)**이나 **과거 5년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의 **85%** 중 높은 것으로 **책정**하되 법정 기준가격의 **115%**를 넘지 못함.
    - ※ 5년 가격 중 최고와 최저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격으로 계산한 평균가격
  - **시장가격**과 **융자단가(loan rate)** 중 높은 가격이 **실효가격**이 되기 때문에 **융자 단가**를 **높게 책정**하여 **최저가격 지지**를 강화함.
  - (**가격손실보상액**) **실효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에 품목의 **단수**를 곱한 **값**의 **85%**를 보상함.
- **[농업수입보상제도]** 주요 품목의 **실제 수입**이 **보장 수입**보다 **작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임.

## ㉔ **아젠다 발굴**

- **기준단수와 기준가격 책정**을 농가에 좀 더 유리하게 설정하여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을 강화함.
- 2014년 농업법은 행정지역단위로 지불되는 반면, **2018년 농업법은 실제로 경작이** 이루어지는 **지역 단위로 개정**함.
- (**기준단수 책정**) 2018년 농업법은 단수를 미국 농업통계국(NASS)에서 제공하는 단수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 단위의 단수**를 사용하고 **추세조정**을 거친 후 **기준 단가**를 책정함.
- (**기준가격 책정**) **가격손실보상제도**에서 사용한 **실효기준가격**을 기준수입 계산에도 사용함으로써 농가에 더욱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개정하였음.
- (**농업수입보상액**) **실제 수입과 보장 수입의 차의 85%**를 보상함.

###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 유럽연합 생산자조직의 사업계획과 정책 지원체계

※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주최 제101차 신유통토론회(2019.11.1.)에서 발표된 “유럽연합 PO(Producer Organization) 제도의 이해” 주요 내용과 유럽연합의 “Regulation (EU) No 1308/2013” 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유럽연합 생산자조직의 사업계획과 정책 지원체계**

- **생산자단체**(Production Organization, 이하 PO)는 **정부와 협력하여 산업발전, 수급 안정,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과일과 채소 분야** 생산자단체 활동이 두드러짐.
  - EU는 **수급관리**를 위해 **1970-1980년대 정부가 직접 시장개입**(가격보장정책)을 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PO가 주도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는 PO를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PO는 농산물 거래 시 유통업자**에 대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들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단체임. **각 회원국 정부는**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조직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PO를 **공인(recognition)**해주고 있음.
  - ※ 요건에는 ▲생산자 주도 결성, ▲생산자조직의 목적을 추구, ▲최소 조직원을 확보, ▲최소 판매된생산가치(VMP) 확보 등이 있음.

## ㉔ **아젠다 발굴**

- PO의 **사업계획**(operational programmes)에는 PO 및 PO직원들의 **향후 3~5년간 생산 및 유통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Regulation No 1308/2013 제33조).
  - △**생산 및 소비예측**과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포함한 **생산계획화**, △**신선상품** 또는 **가공상품의 품질 개선**, △**상품의 상업적 가치 증대**, △**신선상품** 또는 **가공상품의 홍보**, △**친환경적 사업 확대**, △**유기농법을 포함한 친환경적 재배방법 도입**, △**위기 예방 및 관리**(수급관리, 특히 과잉공급 예방 및 관리)
  - **위기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세부 항목**으로는 △**시장 출하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투자**, △**교육**, △**우수사례 상호교류**, △**판촉 활동**, △**상호부조기금**(PO 차원의 수급조절기금) **조성**을 위한 **행정비용 지원**, △**시장격리**, △**수확보험**, △**대출**, △**녹색수확**(green harvesting)\*, △**비수확**(non-harvesting)\*\* 등이 있음.
    - ※ 기후 또는 병충해 우려로 수확 이전에 손상되지 않은 미숙성 비시장성 상품을 수확하는 것을 의미함.
    - ※ ※ 시장성 있는 품질 상품의 현재 생산주기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함. 기후 또는 병충해로 인해 손상된 상품의 폐기는 비수확으로 간주하지 않음.

### ▣ PO 사업계획 항목(요약, 예시) ▣

| 사업 부문      | 주요 세부사업 항목   |
|------------|--|
| 생산계획화      | 영농장비, 유리온실 및 시설하우스, 농업용수관리,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생산계획 수립 활동 등                      |
| 품질개선       | 전기장비, 저온유통체계, 묘목 및 육묘, 정보화장비 및 프로그램, 품질인증, 자체 품질관리규정 및 운영, 냉해관리 등          |
| 마케팅 역량강화   | 저장고 임대, IT강화, 홍보마케팅, 시장분석, 신제품 홍보 등  |
| 연구 및 시범생산  | 연구개발 및 시범생산 관련 사업  |
| 교육 및 컨설팅   | 회원농가교육, 전문직원교육, 전문컨설팅, 시장정보자료 관리 등   |
| 위기 예방 및 관리 | 수확재해보험, 시장격리(폐기, 무료분배) 보상, 조기수확 보상, 수확포기 보상, 홍보 판촉, 위기에방 교육, 상호기금조성 비용 등   |
| 환경친화적 활동   | 유기농 인증, 농약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장비, 토양관리, 폐기물 최소화, 경관 보호, 종다양성 유지, 에너지 절약, 친환경포장재 등 |

자료: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제101차 신유통토론회(2019.11.1.)

- 공인된 PO는 **수립한 사업계획**을 **회원국 정부**에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심의** 등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 ㉔ 아젠다 발굴

- PO는 사업자금(Operational Fund)을 조성할 수 있으며, 사업자금은 PO 자부담금과 EU의 재정지원금으로 구성됨.
- EU의 재정지원은 자부담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음(전체의 50% 이내). 또한, PO에 대한 재정지원은 회원국 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EU가 직접 담당하며 회원국은 재정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다만 과일·채소 부문 시장격리(market withdrawal)의 경우 EU 재정지원 한도와는 별개로 EU가 100% 재정지원하고 있음. 이 경우 격리한 물량은 자선단체나 기타 기관에 무상배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함.
  - ※ ※ PO의 조직화 수준이 특별히 낮은 회원국들에 대해서 EU는 해당 회원국들에게 PO 자부담의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EU의 재정지원은 PO의 판매생산가치(the Value of the Marketed Production, VMP)의 4.1% 이내이어야 함. 다만 4.1%를 초과하는 금액을 위기 예방 및 관리에만 사용하는 경우, 판매생산가치의 4.6%까지 확대 가능함.

### ㉕ PO 정책지원체계



자료: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제101차 신유통토론회(2019.11.1.)

## ㉔ **아젠다 발굴**

###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농촌진흥 정책 방향**

※ 일본 농림수산성 식량·농업·농촌 정책심의회의 「現行基本計画の検証とこれを踏まえた施策の方向(案) (農村の振興’ 東日本大震災からの復旧・復興’ 団体の再編整備等に関する施策)」 (2019.10.3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 **농촌진흥 정책 방향**

○ 일본 농림수산성은 새로운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월 30일**에는 **농촌진흥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에 근거하여 일본 정부의 중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할 방침, 정세변화 등에 따라 5년마다 변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새롭게 발표될 예정임.

○ 국토보전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주요 농업인뿐만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 농가 이외의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주민 전체**가 **지탱**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농촌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소득과 고용확보, 지역 커뮤니티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일본 농림수산성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전체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함.

### ┃ 지역자원 유지 및 계승 ┃

| 구분        | 현행 기본계획  | 향후 정책 방향  |
|-----------|--|---|
| 다원적 기능 발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원적 기능 직불금은 조직체제 강화, 비농업인 참여 등을 촉진, 중산간지역 등 직불금을 활용하여 마을 연계 체제를 만들어 급경사지 보전을 추진, 일본형 직불금을 활용하여 지역 공동 활동을 통해 농지를 적절하게 보전관리</li> <li>• 중산간지역 농업 진흥을 위해 직불금 지원과 중산간지역의 농업 르네상스사업 추진(중산간 지역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사업)</li> <li>• 지형 및 기후 특성을 살려 급경사 지역 등에서 약용작물과 과수 등의 고부가가치 작물 재배 및 노동력 감소 기술 보급</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커뮤니케이션 유지·재생·강화를 위해 활동 조직 광역화·네트워크화 및 법인화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 및 타 분야와 네트워크 형성, 이를 통해 사람·농지플랜(지역의 농업 목표 계획) 등과 연계강화 추진</li> <li>• 농업인·시정촌(기초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중산간지역 등 직불금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불안 해소 등을 통해 조건불리지역의 농업 생산활동 유지 가능 체제 구축</li> <li>• 고수익작물 도입, 스마트농업 및 노동력 절감 재배 기술을 도입하여 지형 및 기후를 활용한 농업 진흥</li> </ul> |
| 마을 기능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진흥 직불금을 활용하여 지역 활동 계획(지역 미래 비전)을 작성, 의욕 있는 도시 청년 등 외부 인재를 장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와 연계하여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미래상 검토, 작은 거점 만들기 등을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지원</li> <li>• 인구감소·고령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 다양한 기술을 가진 인재 지역 활성화 참여 유도 등 지역 관련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응 추진</li> </ul> <p>※ 지역이나 지역 사람들과 다양하게 관련된 사람 (이주한 정주 인구 및 여행객 제외)</p>  |

## ㉔ 아젠다 발굴

| 구분         | 현행 기본계획   | 향후 정책 방향  |
|------------|---|---|
| 야생동물 피해 대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생동물 피해방지 직불금을 활용하여 지역 전체에 울타리 설치 및 포획 강화, 처리가공 시설 및 소각시설 정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원</li> <li>야생동물 대책반* 설치 목표 수 달성에 근접,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피해액 감소 경향</li> <li>※ 야생동물 포획, 방호책 설치, 기타 피해방지 계획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야생동물 피해 방지 활동 추진</li> <li>자비에(gibier, 수렵육) 이용량은 2016년 대비 2018년 47%가 증가, 지속적인 추진 필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나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피해 방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청년층 참여 촉진을 통해 야생동물 대책반의 기능을 강화하여 피해 방지 대책 추진</li> <li>국산 자비에 인증제도 보급, 포획자 위생관리 기술 향상, 반려동물 식품으로 이용확대 등 자비에 활용 추진</li> </ul> |

## ㉕ 고용 및 소득 창출

| 구분             | 현행 기본계획   | 향후 정책 방향   |
|----------------|---|--|
|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량산업·6차산업화 직불금, A-FIVE(농림 어업성장산업화기구)를 통한 출자, 6차산업화 플래너 파견 등을 통해 6차산업화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장이 기대되는 농업벤처나 가공품의 수출 등 식품산업의 2차·3차산업이 농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비즈니스 창출 및 가공·업소용 수요를 반영한 대응 촉진</li> </ul>   |
| 바이오매스 재생에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하에 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업계획 책정, 영농형 태양광 실증 및 농산어촌 재생에너지법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li> <li>2016년 새롭게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계획 책정</li> <li>바이오매스 산업도시 선정지역에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조사·설계, 시설정비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 시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역 바이오 매스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기술 개발 및 보급</li> <li>에너지 이외에도 자원 유효활용 관점에서 지역 바이오매스 활용 촉진을 위해 바이오매스 제품 사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추진</li> </ul> |
| 농촌으로 농촌관련사업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지역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검토,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2017년 7월 농촌신업법(구 농촌공예도입법) 개정, 대상 업종을 기존의 공업 등의 다섯 가지 업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신업법을 활용하여 농촌지역 고용 창출 촉진</li> <li>농산어촌에서 비즈니스 전개 및 새로운 사업 추진</li> </ul>  |

## ㉖ 도시 농촌 교류 및 이주·정착

| 구분       | 현행 기본계획   | 향후 정책 방향   |
|----------|---|--|
| 도시 농촌 교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민의 전통적인 생활 체험과 비농기를 포함한 농촌 주민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농박**' 추진, 2020년까지 비즈니스 체제를 갖춘 농촌 관광지를 500곳으로 확대</li> <li>※ 체류형 농촌관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숙박, 식사, 체험이 제공 가능한 수용체제 정비, 콘텐츠 질 향상 및 양적 확대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이 농산어촌 지역의 체류형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확립</li> <li>장기체류도 고려한 수용체제 방향 검토</li> </ul> |

## ㉔ 아젠다 발굴

| 구분                | 현행 기본계획   | 향후 정책 방향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이거나 취약계층 자립을 위해 농업과 복지 연계대책을 세워 사회적농업 확대, 농촌정착 추진, 2019년 6월에 농업과 복지 연계 추진 비전 책정</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지도 향상, 수요에 맞는 매칭, 전문인재 육성, 국민적 운동 등을 통해 농업과 복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농업경영이 경제활동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 정비</li> </ul>                        |
|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 및 정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일 부대’ 를 ‘지역 부흥 협력대’ 로 명칭을 통일하는 등 인재 파견·정착화 실시</li> <li>지역활성화대책 등 ‘인재활용사업’ 을 통해 지역 외에서 인재 등을 농촌 이주·정착 촉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산어촌 지역에서 농업과 농촌관광사업 등 겸업·부업, 도시와 농촌 두 지역 거주 등 다양한 근로 양식이 가능하도록 체제 정비</li> <li>빈집이나 휴경지 등 활용이나 해외 인재를 포함한 다양한 인재 활용 추진</li> </ul> |
| 도시 농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도 도시농업진흥기본법을 제정하여 도시 농업 진흥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확화하고 2016년도에 도시농업진흥 기본계획을 책정하여 도시 농업 진흥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제시</li> <li>2018년도에 도시 농업 대차법을 제정하여 도시 농지 대차 원활화, 2015년부터 도시 농업의 다양한 기능 발휘를 촉진하기 위한 대응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 농업의 지속적인 진흥을 위한 대응 추진 및 과제에 대한 지원책 검토</li> <li>도시 농업이 갖는 다양한 기능을 널리 홍보</li> <li>도시농지대차법의 원활한 운용을 통해 도시 농지 유효활용</li> </ul>      |

### 언론 동향

### 유럽연합 PO제도와 국내 조직화 사례 토론회 주요 내용

※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하였습니다.

## □ 유럽연합 PO제도와 국내 조직화 사례 토론회 주요 내용

-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은 ‘유럽연합 PO\*(Producer Organization·생산자조직) 제도와 국내 조직화 사례’ 를 주제로 101차 신유통토론회(2019.11.1.)를 개최하여 정부와 전문가, 산지 조직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여러 의견을 제시
  - ※ PO: 품목부류 생산자들에 의해 구성되고 통제되며, 생산자 주도하에 결성된 조직

### <발표 1: ‘유럽연합 PO 제도의 이해’, 하석건 한서아그리코 대표>

- 그는 “1990년대 이후부터 PO 주도의 거래교섭력 강화, 수급관리 등 시장안정화, 부가가치 제고,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 등을 추진했다” 며 “동시에 PO는 정부와 협력해 농산물 시장의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해소하는 주체로서의 책임 기능을 수행한다” 고 언급

## ㉔ **아젠다 발굴**

| 〈PO 운영규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O 조직원은 조직이 취급하는 농산물 생산 전량을 소속 생산자조직을 통해 시장에 판매해야 하며 단, 자가소비나 로컬푸드 출하 등 약간의 예외는 있다.</li> <li>◆ 생산자는 특정 상품에 대해 하나의 PO 조직원이어야 한다.</li> <li>◆ 조직원은 통계 목적으로 PO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li> <li>◆ PO는 조직원들의 경제활동과 관련해 조직원을 대신해 활동해야 한다. 여기엔 판매권의 위임과 관련 사업 집행 권한이 주어진다.</li> </ul> |

- PO와 이들이 모여 설립한 **APC(Association of Producer Association · 생산자조직협회)** 등은 그들이 정한 규칙을 확대해 적용해 달라고 요청(유통명령제와 비슷)할 수도 있고, **대표성(금액기준 50% 이상)**을 갖춘 **PO, APC** 등은 그들이 **정한 협의 사항을 유럽연합 회원국에 확대 적용**해 달라고 **요청**이 가능
- **유럽연합**으로부터 **재정지원**도 받는데 단 **전체 시장의 균형**을 위해 **회원국 정부나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없어**
  - **재정지원**은 PO 또는 APC의 **판매생산가치의 4.1% 이내(자부담 50%)**로 **제한**하며, **과일 · 채소 부분 시장격리**의 경우 시장격리 물량이 **판매생산가치의 5% 이하**일 때 **유럽연합이 100% 재정지원**

### 〈발표 2: ‘농산물 유통 공익적 가치의 의미와 생산자조직 육성방안’ , 안재경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장〉

-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이용비용 문제]** APC를 이용하면 노동력 감소와 수취가격 상승 이점이 있음에도, **APC 이용비용 부담**을 꺼려 **공동행동**에서 **이탈**, 더욱이 최근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APC 운영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농업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난다**고 지적
-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먹거리 정의**를 위해서라도 **산지유통의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고 강조
  - “APC의 공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핵심 비용의 지원은 집행 예상액의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며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듯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회간접비용화**를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
- 또한, “**APC,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센터** 등과 같은 **산지유통시설의 공공 유형**을 **확대**하고 **산지유통체계 혁신**을 위한 **대한민국형 P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언급

## ㉔ **아젠다 발굴**

### <발표 3: ‘국내 광역 조직화 사례와 시사점’, 강성채 순천농협 조합장>

- **순천농협 농가조직화 활성화 사례**] △**농가조직화 추진방안**, △**소량다품목 중심의 계약재배**, △**거점 APC 활성화**, △**공선출하회 육성**, △**품목별 농가조직화** 등 **합병농협의 농가조직 활성화 사례 중심**으로 발표, 또한 WTO 개도국 포기에 따른 농협의 역할과 **농산물 신유통**이 가야 할 **방향성** 등을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
  - **순천농협**은 생산자조직화를 위해 △**공선출하회 조직 육성 및 교육**, △**생산지도 및 농산물 상품화 지도**, △**계약재배**를 통한 **소량 다품목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작부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
  - 그는 생산자조직화를 통해 “**개별 수탁판매 대비 공선출하회 참여농가 소득이 14~20% 높고, 소량 다품목 연중 생산체계 구축으로 고령농가 및 중소농가의 소득 창출** 창구가 된다” 고 전해

### <농식품부 정책 방향>

- 종합토론에서 이정삼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PO를 주목한 이유는 우리가 통합 마케팅 조직을 운영하지만 법적 조직이 아니다” 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넣고 **의무를 부여**하는 쪽으로 **농안법 개정**을 고민하고 있다” 고 언급
- 이어 “**농안법상 수탁금지 거부**는 예외를 뒤 **PO가 만든 것은 정가·수의매매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며 “또 **가격 결정 체계**는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일일 물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채소·과일 품질**에 의해 **결정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
- **APC의 사회간접자본화**에 대해선 “아직 소비자나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시기상조**라고 본다” 면서 “그래서 **공공유형**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로컬푸드직매장** 등은 **국고와 지방비**로 지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냈다” 고 밝혀

### <종합토론>

- 김성훈 충남대 교수는 “정부와 농협이 주도해 온 **농산물 유통**이 **생산자들이 주도**하는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 며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것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집중적인 농가교육**이 **필요**하다” 고 언급

## ㉔ **아젠다 발굴**

- 박성대 옥정농협 상무는 “조직화를 한다고 판매가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며 “**조직화와 판매가 같이 가야** 한다” 고 강조
- 박해근 남원시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생산자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조직 육성이 필요**하다” 고 지적
- 이광형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산지유통인들과 생산자조직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라고 언급

자료: “신유통연구원, 유럽연합 PO제도와 국내 조직화 사례 토론회 개최” (농수축산신문, 2019.11.1.), “강성계 순천농협 조합장, 신유통 토론회 발표자로 나서” (서울신문 2019.11.1.), “강성계 순천농협조합장, ‘신유통 토론회’ 서 사례발표 호응” (헤럴드경제, 2019.11.1.), “산지유통체계 혁신을 위한 한국형 PO제도 도입을” (한국농어민신문, 2019.11.5.), “ “생산자 조직화 왜 안 될까” 먹거리 유통 비용 간접비로 돌려야” (한국농업신문, 2019.11.5.)

# 통계·조사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자료 : 통계청(2019.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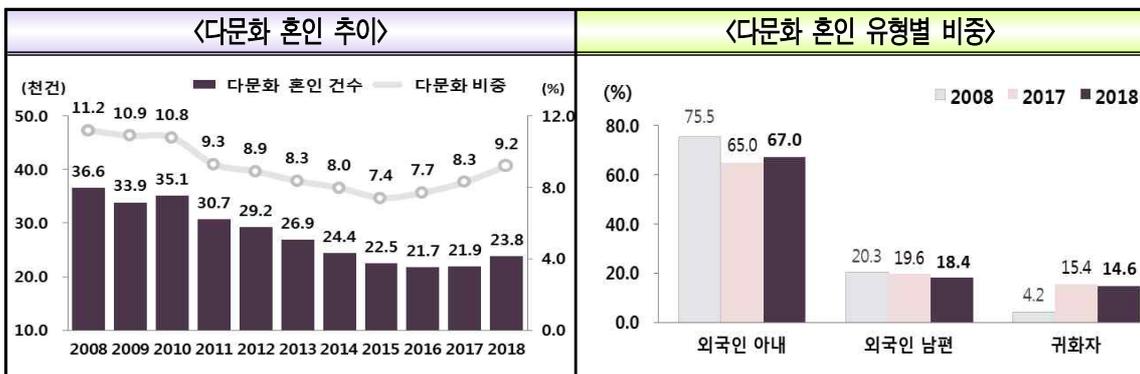
## 개요

- [통계청,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발표, 2019.11.6.] 다문화\*\* 사회의 통합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로 다문화 혼인, 이혼, 출생, 사망 통계를 작성
  - ※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출생·사망·혼인·이혼 자료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자료를 활용, 2008년 자료부터 작성 대상 및 기간)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 약 2만 2천 개소 현지조사 / 2019.9.15.~10.4.
  - ※※ 다문화 인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정의를 준용하여 한국인과 결혼이민자 및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 국적 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구성원을 의미

##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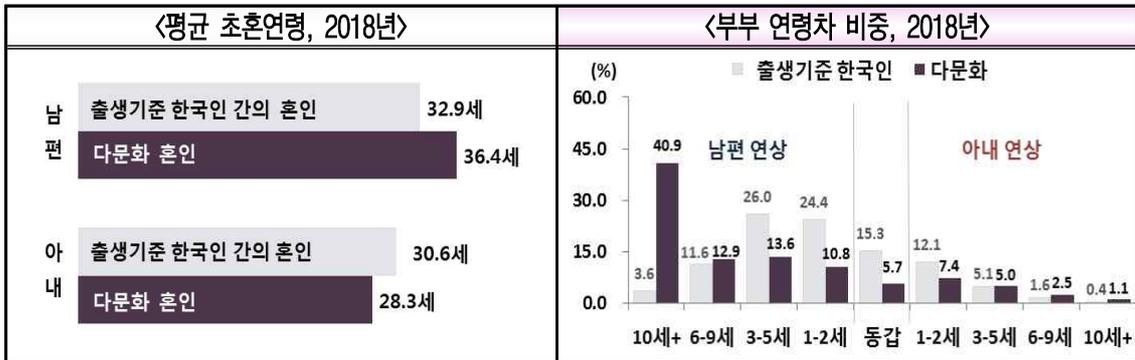
### <1. 혼인>

- [다문화 비중]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9.2%, 전년 대비 0.9%p 증가
- [혼인유형] 외국인 아내(67.0%) > 외국인 남편(18.4%) > 귀화자(14.6%) 순
  - 전년 대비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2.0%p 증가, 귀화자 혼인은 0.8%p 감소



- [평균 초혼연령] 남편 36.4세, 아내 28.3세로 전년 대비 0.3세, 0.2세 각각 증가
- [부부 연령차] 남편 연상부부가 78.2%로 가장 많고, 남편이 10년 이상 연상인 부부는 40.9%로 전년 대비 1.4%p 증가

㉔ 통계·조사



○ [출신 국적]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국적은 베트남(30.0%) > 중국(21.6%) > 태국(6.6%)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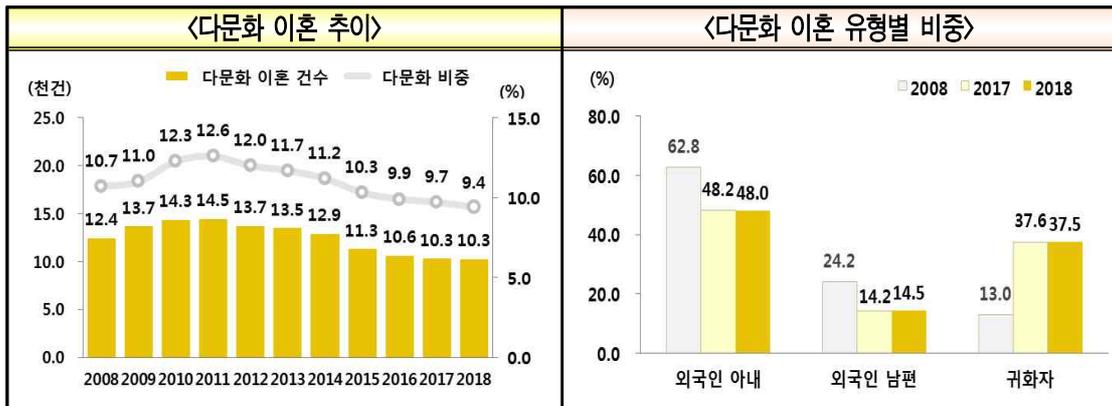
- 전년 대비 베트남과 태국의 비중은 각각 2.3%p, 1.9%p 증가, 중국은 3.4%p 감소

〈2. 이혼〉

○ [다문화 비중] 전체 이혼 중 다문화 이혼의 비중은 9.4%, 전년 대비 0.3%p 감소

○ [이혼유형] 외국인 아내(48.0%) > 귀화자(37.5%) > 외국인 남편(14.5%) 순

- 전년 대비 외국인 남편은 0.3%p 증가, 외국인 아내, 귀화자는 각각 0.2%p, 0.1%p 감소



○ [평균 이혼연령] 남편 49.4세, 아내 39.3세로 전년 대비 0.7세, 0.4세 각각 증가

○ [결혼생활 지속기간] 다문화 이혼자의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8.3년으로 2008년(3.7년) 대비 4.6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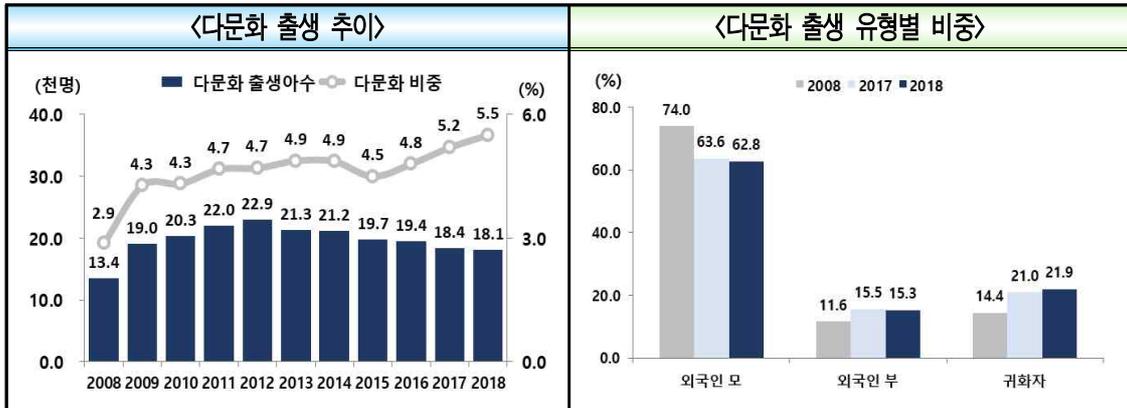
○ [출신 국적] 외국인 및 귀화자 아내의 출신국적은 중국(39.9%) > 베트남(26.1%) > 필리핀(3.9%) 순

- 전년 대비 중국의 비중은 1.9%p 감소, 베트남, 필리핀은 0.1%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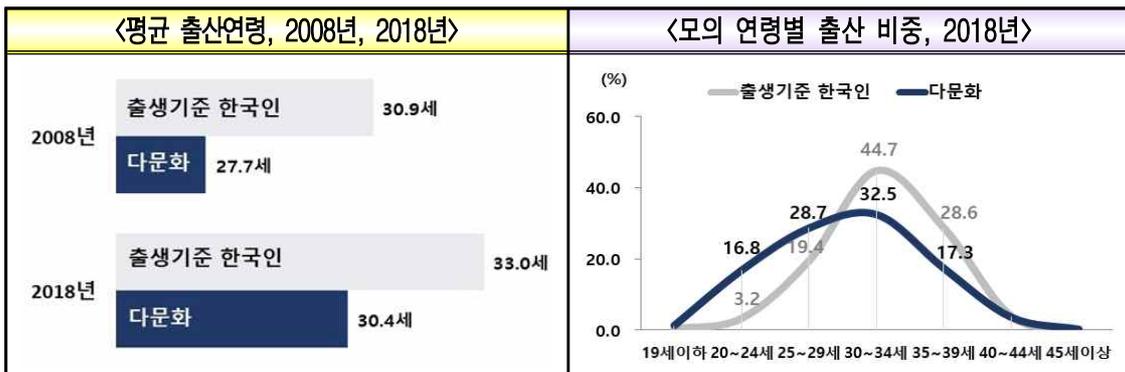
## ㉔ 통계·조사

### <3. 출생>

- **[다문화 비중]**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의 비중은 **5.5%**, 전년 대비 0.3%p 증가
- **[출생유형]** 외국인 모(62.8%) > 귀화자(21.9%) > 외국인 부(15.3%) 순
  - 전년 대비 외국인 모, 외국인 부 각각 0.8%p, 0.2%p 감소, 귀화자는 0.9%p 증가



- **[평균 출산연령]** 다문화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0.4세**, 2008년 대비 2.7세 증가
- **[연령별 출산]** 모의 연령별 출산은 **30대 초반(32.5%)** > 20대 후반(28.7%) > 30대 후반(17.3%) 순



- **[출신 국적]** 외국인 및 귀화자 모의 출신국적은 **베트남(35.6%)** > 중국(20.8%) > 필리핀(6.9%) 순
  - 전년 대비 베트남 비중은 0.9%p 증가, 중국과 필리핀은 각각 1.2%p, 0.4%p 감소

※ 자세한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